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선거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소수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생존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야3당은 이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사표(死票)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며 극단적 양당 대립 정치에서 벗어나 다당제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선거 제도는 민주 정치의 핵심인 대의과정의 본질을 규정해 준다. 그런데 선거 제도가 왜곡되어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훨씬 유리하고 심각한 표의 비등 가능성이 노정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동상이몽의 선거 제도 개혁 논란 해법은?

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심각한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선거 제도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선거 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향후 선거제 논의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가령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초과 의석이 발생되어 의원 정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정당 득표율로 배분 의석을 정한 후, 배분 의석 안에서 지역구 의석을 먼저 채우고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017년 9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에서 무려 111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했다. 2016년 총선 결과를 연동

형 비례대표제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41석,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11석,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7석 등 59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인 비례성과 대표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데 초과 의석 문제는 단순히 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구의 비율을 균등하게 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잠정적으로 의원 정수가 총 598명이고, 지역구와 비례구 비율이 1대1이지만 엄청난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

지역구 소선거구로 인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 하는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면 초과 의석은 피할 수 없다. 단언컨대, 초과 의석을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은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경우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들

은 의원 밥그릇을 늘리는 의원 정수 확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조응하는 선거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 제도는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당제에 바탕을 둔 연립정부가 보편화된 나라에서 주로 사용된다. 물론 각국의 선거 제도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다. 하지만 국경 안정보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에 거론되고 있는 권력 구조 개편의 핵심 방안인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각각 부합되는 선거 제도 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선거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은 손을 떼야 한다. 헌법상 독립 기구인 중앙선관위에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선거 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제도 방식,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 비율, 공천 방식 등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선거제 개혁의 유일한 해법이다.

종교칼럼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하나의 촛불을 들며



장현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

호하라. 안전원칙 무시하는 대한화력 규탄한다. 외주화를 멈추시라, 죽음을 멈추시라.”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에서 말하는 추모 집회 공식 구호다. 얼마나 절절하고 슬픈 구호인가.

지난 12월 11일 고 김용균 씨는 혼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순찰하던 사고로 숨졌다. 그의 곁에는 기계를 멈추어 줄 동료가 단 한명도 없었다. 외주화로 인해 2인 1조의 안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5시간 이상 방치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처럼 청년 노동자들은 끝없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년 전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청년의 가방 속에 있는 컵라면이 들어 있었다. 여러 작업 공간 사이에 들어 있던 컵라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렸다. 그로부터 1년 만에 그보다 더 어린 고등학교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낫같은 나이에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유품에서 나온 컵라면의 사례도 2년 전 발생한 구의역 사고와 똑같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

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직접 쓴 글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역장이 무너진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속썩인 적이 없다. 너무 착하고 예쁘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들이다. 아들 하나뿐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우리 부모도 같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 희망도 없다. 이 자리에 나온 건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은 거 진상 규명하고 싶어서다.(중략) 이걸 한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오라 하고 싶다. 아들이 일하던 곳 정부가 운영한다는 게 믿기지 않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다. 아니 우리나라를 저주한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소용없다. 명예회복 거거 하나 찾고자 한다. 아들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도와 달라. 아이가 취업한다고 수십 군데 이력서 넣었는데 마지막 구한 곳이 여기도. 대통령이 일자리 만든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는 일자리가 늘어나 지어지지 않았다. 말로만이다.”

김 어머니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험 사회다. 위험이라는 파도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 탄생의 성탄절이다. 어두운 오막에서 간절히 부르는 아프리카 노예의 콤페야 노래가 생각나는 아침이다.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고달픈 노예 생활과 굶주림을 달래주는 것은 음악과 춤이다.

거기에 신앙으로 인해 희망을 갖게 된 노예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 '콤페야'(Kum ba ya)다. '콤페야'는 (Come by here, my Lord) '여기 오소서, 내 주여'라는 뜻이다. 영어 발음이 잘 되지 않던 노예들이 'Come by here'를 콤페야로 잘못 읽으면서 콤페야로 고착되었다. 이 역압의 시간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콤페야를 조용히 불러낸다.

2018년 성탄의 계절 오늘도 우리는 '여기 오소서, 내 주여'를 노래하는 슬픈 현실이지만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2:14, 공동 번역)라는 말씀으로 독자 여러분께 성탄인사 드린다.

기고

광주형 일자리에도 봄이 오는가?



김수관  
조선대 대외협력처장

기업 투자를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독일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이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노사의 대타협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했다. 폭스바겐 사례인 '아우토 5000'(AUTO 5000)의 고용 조건은 지원자들에게 최소 2년 이상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

광주형 일자리도 이와 비슷하게 성공하려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폭스바겐의 노사 합의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바탕에는 '기업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전통이 깔려 있다. 폭스바겐의 페터 허르츠 노동이사 "인간이 없이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폭스바겐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의 파트너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우토 5000'에는 주당 5일씩 35시간을 근무하는 '유연(탄력) 근무제'를 도입했다. 또한 품질 검사 결과 작업자의 잘못으로 불량이나 손상으로 발

하지만, 근무조가 바뀔 때 주어지는 30분의 교대시간 동안 무임금으로 작업을 계속한다. 또 월 임금도 5000마르크(약 310만~375만 원)만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는 폭스바겐 노동자보다는 15~20%가 적은 수준이다. 결국 '아우토 5000' 프로젝트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노사의 협력과 양보,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우토 5000은 고용 안정과 관련해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광주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경제의 회생뿐만 아니라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고용 증가로 인해 크고 작은 사업장의 활력이 넘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산업이 서로 지지하며 발전하게 된다.

둘째, 청년들의 광주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는 활력을 잃고 결국 쇠퇴하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와 든든한 주택, 교육,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물리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타 산업으로의 이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작은 광주에서 했지만, 타 지방 도시의 일자리 낙후를 개선하고, 여러 산업에 적용하면 결국적으로 지역별, 산업별 일자리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조선대학교와 같은 지역 대학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수 인재 및 청년의 이탈 이유가 '학업'인 부분이 적지 않고, 대학이 지역 기업들과 산학 협력, 계약 학과 신설, 기업 맞춤형 교육 등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야 지방 도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근로자들의 평생 교육 복지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국가 평생 교육 지원 사업인 미래사회융합대학을 통해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떠나는 광주'를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므로 광주시와 정부는 노사민정 등 각계와 사회적 합의의 결실을 맺어 미래 먹거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社說

'민간공원 파장' 광주시 행정 불신 자초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교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최근 민간공원 2단계사업 6개 지구 중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교체하고 해당 공무원원을 대기 발령했다.

시는 교체 이유를 1지구의 경우 심사에서 토지 가격 산정을 잘못 적용했고 2지구는 감정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결과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당초 심사를 잘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재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변경한 것 자체가 스스로 행정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시민평가단과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겼다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감사를 통해 재평가를 한 것을 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자진 반납 형식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

성하다. 도시공사는 시 행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지만 광주시의 의중을 미리 읽고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교체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금호 측은 평가 점수 적용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데도 이를 업체에 전가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행정이 신뢰를 잃자 이번에는 일곡공원에서 탈락한 후 순위 업체까지 광주시에 재평가 결과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은 애초 감사에 착수할 때부터 순수성을 의심받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공무원이 잘못을 했다면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만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스스로 자초한 행정 불신을 해결하는 길은 수사 의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심사 기준을 밝히는 길 뿐이다.

문화전당의 구상권 포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지연을 이유로 5·18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려 했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단체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를 주장하며 2년 동안 정거 농성을 벌임으로써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피해액 110억 원을 건설사 측에 배상한 뒤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5·18 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문화부는 서울고검의 의견 검토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를 모인 5·18 단체를 상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화부가 충분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이제라도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과거 5월단체가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농성을 벌인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옛 전남도청 별관은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항쟁지로서 5·18의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이유로 철거하는 바람에 5월단체와 유가족의 비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상권 청구 포기로 인해 정부가 감내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부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은 여타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문화전당의 미래를 위해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정부와 5월단체는 그간의 묵은 앙금을 씻고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마주 잡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멀지만 유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국제 정세에 따라 중국과 대립하거나 화친 또는 조공 관계였다는 역사적 상황 또한 비슷했다. 일찍이 160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인연도 있었다. 당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 시인은 누구였을까? 같은 한자 문화권을 감안하면 먼저 중국 대표 시인인 두보나 이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의외로 최고의 인기 시인은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이었다. 명나라 북경에서 베트남의 풍악관과 조선의 이수광이 외교 사절로 만나 50일 동안 함께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은 한자로 필담을 나누며 틈틈이 시를 써서 주고받았다. 이수광의 시에 매료된 풍악관은 귀국 후 자기 나라 유생과 관리들에게 널리 알렸는데 특히 베트남 유생들은 이수광의 시를 모두 외울 정도였다고 한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胡志明)도 다산 정약용을 정선적인 스승으로 여겼다 한다. 1930년대 소련은 아시아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국제레닌 대학에서 교육시켰다. 이때 호찌민과 조

선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박헌영이 국제레닌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당시 박헌영이 호찌민에게 다산의 목민심서를 선물했다고 전해진다. 과정일지 모르지만 호찌민은 목민심서를 47번이나 읽어 나중에는 책이 거의 헤질 정도였다고 한다.

최근 베트남 축구 대표 팀을 10년 만에 동남아 최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영 TV가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에 선정되는 등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박 감독은 '팜딕' 등으로 불리다가 최근엔 '타이' 이름을 또 얻었다. 베트남어로 '스승'이라는 뜻인데 외국인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화가 쩌테민이 그린 박 감독 초상화 제목도 '나의 스승'이다. 오는 30일 개최되는 자선 경매에 시작가 5000달러(약 565만 원)로 출품되는데 과연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취업난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국민이 사랑하는 스승 한 명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 州 日 報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The Kwangju Ilbo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국내 신청 배달 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정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정 처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019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